

**분단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정책의 상호관계 :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주주의 이념과 정책, 분단극복  
방안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노명환\*\*

- I. 머리말
- II. 민주주의에 기반한 분단극복 정책에 대한 설명 틀로서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 III.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비추어 본 빌리 브란트의 민주주의 개념과 동방정책
- IV.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 비추어 본 김대중의 민주주의 본질과 그에 기초한 분단극복 정책
- V. 맺음말

## I. 머리말

필자는 본 논문에서 ‘냉전시대 분단국에서 민주주의는 어떠한 의미를 가졌으며, 민주주의와 분단극복 정책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하는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그 중 특히 분단극복은 민주주의에 기초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전제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필자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정치지도자 빌리 브란트와 대한민국(남한)의 정치지도자 김대중의 민주주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은 “유럽의 위기와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의 한국유럽학회 주관 학술회의의 통합유럽연구회 분과 (2012.06.09)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외대 사학과 / 대학원 정보·기록관학과 교수

의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추진한 분단극복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서독과 남한에서 각각 분단 현실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정치적 입장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입장과 그 제도적 관행적 현실에 있어서 독일 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커다란 양적 그리고 질적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은 평화의 정착 속에서 분단극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길이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라고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민주주의를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자유라는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인 구체적 삶의 측면에서 이해했다. 달리 말해 정치적 인권(Politische Menschenrechte)과 사회적 인권(Soziale Menschenrechte)이라는 측면서 보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민주주의와 평화체제의 상호관계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정한 상호 소통을 통한 공동의 의식의 구성 및 표출과 행위로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으로 보았다. 이러한 소통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삶의 조건을 공동으로 향상시키면서 나누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해 그들은 민주주의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삶에 기반한 공정한 상호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리고 이해관계를 구성해 가는 장으로 인식했다. 평화는 이러한 소통과 상호구성을 위한 장의 전제조건이었고 또한 이러한 소통과 상호구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공동체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해 가는 행위를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생각했다. 곧 정책 초점은 현실을 기초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 소통을 통해 지향가치를 공동체 정체성으로 구성할 수 있는 환경적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들에게 이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작용,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과 지향하는 가치 사이의 상호 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구조적 현실이 구성될 수 있었다. 이는 분단된 상황에서 끊임 없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각 진영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인권의 질을 높이고 양 진영 사이의 적대의식을 공동체 운명의식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전쟁의 목적을 평화의 가치로 새롭게 구성해 내는 정책을 의미했다. 즉, 그들은 민주주의를 통해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해 나가하고자 했다. 또한 역으로 이러한 장을 위해 모든 가능한 현실적 방법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분단극복 정책을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적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분단극복 정책의 차이점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필자는 그동안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지역공동체 정책과 연계된 분단극복 정책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방법의 적합성에 대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sup>1)</sup>

본 연구를 위해 필자는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본 주제 관련 주요 기록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분단극복 방안을 파악할 것이다. 이 개념들과 정책들에 대해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상호 비교할 것이다.

## II. 민주주의에 기반한 분단극복 정책에 대한 설명 틀로서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 1. 구성주의 이론과 정체성의 개념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정체성이 구성된다는 관점의 이론으로서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본질주의(Essentialism)와 대립각을 세운다.<sup>2)</sup> 정체성은 무엇인가? 구성주의자들은 정체성을 “주체와 구조가 상호 구성한다는 존재론에 입각하여” “시간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관계”로 본다.<sup>3)</sup>

- 
- 1) 노명환,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 정책 :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EU연구』 30(2012).
  - 2) David D. Latin, *Identity in Form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10-24쪽; Menno Spiering, “National Identity and European Unity,” in Michael Wintle (ed.), *Culture and Identity in Europe. Perceptions of divergence and unity in past and present* (Oxford 1996), 98-132쪽.
  - 3) 오디 클로우스·시실리아 린치 저/손혁상·이주연 옮김,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관계 연구 전략』(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107쪽.(Audie Klotz·Cecelie Lynch,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Barnett, Michael, *Dialogues in Arab Politics: Negotiations in Regional Order*

예를 들어 개인들은 생활 속에서 선호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자아와 타자의 범주를 인식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같은 선호를 갖는 집단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집단들 사이에 안보의식과 같은 사안에 따라 우리와 적의 범주가 들어서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과 맥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아와 타자와의 범주는 변화하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정체성은 불변의 특성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구성주의자들은 “사람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생산하고 또 재생산한다.”<sup>4)</sup>고 말한다. 이 정체성은 개인과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또한 끊임없이 새롭게 규정한다. 즉, 그들은 ‘이해관계는 정체성에서 비롯된다.’<sup>5)</sup>고 본다. 이러한 구성주의자들의 입장은 “이해관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물질적 근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대부분의 현실주의자, 자유주의자, 구조주의자, 그리고 마르크시스트들의 견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특징이다.<sup>6)</sup> 구성주의자들은 “개인과 집단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의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바꿀 수 있다”<sup>7)</sup>고 믿는다.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민족과 국가를 ‘상상의 공동체’<sup>8)</sup>로 표현했을 때 이는 구성주의 입장에 의한 국가공동체 구성의 전형적인 논리라고 볼 수 있다.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사회구성론’은 구성주의에 기반한 정체성 구성의 구체적 연구로서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 작용에 의한 ‘구조화’의 사회구성 과정을 하나의 체계적 이론 틀로서 설명해 주고 있다.<sup>9)</sup> 예를 들어 기든스는 ‘세계화’ 과정도 시간과 공간의 끊임없는 확장 속에서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구조화를 이루어가는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 과정으로 본다. 구성주의 이론은 포스트모던 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비판적인 방향이든

---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4) 오디 클로우츠·시실리아 린치 저/손혁상·이주연 옮김, 같은 책(2011), 107쪽.

5) 오디 클로우츠·시실리아 린치 저/손혁상·이주연 옮김, 같은 책(2011), 137쪽.

6) 오디 클로우츠·시실리아 린치 저/손혁상·이주연 옮김, 같은 책(2011), 137쪽.

7) 오디 클로우츠·시실리아 린치 저/손혁상·이주연 옮김, 같은 책(2011), 21쪽.

8)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London·New York, 1991; 1. version 1983).

9) Anthony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황명주·정희태·권진현 역, 『사회구성론』(자작아카데미, 1998).

혹은 계승적인 차원이든)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지배담론이 그 사회 구조의 핵심을 이룬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민족주의와 애국심, 반공이념과 안보의식 등이 한 사회의 지배담론으로서 정치·경제·사회의 작동 기제로 작용하며 그 사회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 구조와 그 사회 구성원들인 행위자 사이에 끊임없는 간주관성의 소통을 통해(communication of intersubjectivity) 상호 작용의 상호구성 관계가 그 지배구조를 강화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저항담론을 대두시켜 그 구조 질서를 바꾸기도 한다. 이렇게 각 사회의 지배담론이 지배구조의 핵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각 사회의 정체성과 이해관계의 근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성주의 이론은 포스트모던 담론이 제시한 사회구조의 실체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받아들인다. 이는 ‘언어적 전환 (linguistic turn)’ 혹은 ‘문화적 전환 (cultural turn)’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성주의자들은 구조를 표상(representation), 즉 언어와 문화에 나타난 상으로 호칭하기도 한다.<sup>10)</sup> 구성주의 이론은 현재 웬트(Alexander Wendt)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틀로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sup>11)</sup> 구성주의자 계보를 보면 다음 절에서 설명할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도 구성주의자로 분류된다.<sup>12)</sup> 하버마스는 간주관성의 소통인 공론장의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사회의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듯 이렇듯 ‘언어로의 전환’ 관점 등이 그의 이론과 구성주의 이론 사이에서 공통점을 이룬다. 그에게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을 향한 상호구성 과정이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장들에서 설명하듯이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분단극복 정책의 핵심은 냉전시대의 갈라진 정체성에 기반한 대립과 적대의식을 새로운 차원의 정체성

10) 오디 클로우츠·시실리아 린치 저/손혁상·이주연 옮김, 앞의 책(2011), 21-26쪽, 172 (추천도서).

11)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3(1987), 335-370쪽; Alexander Wendt·Raymond Duval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Order," in Ernst-Otto Czempiel and James N. Rosenau (ed.), *Global Changes and Theoretical Challenges* (New York, 1989);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2) 오디 클로우츠·시실리아 린치 저/손혁상·이주연 옮김, 앞의 책(2011), 149-155쪽, 173 (추천도서).

구성을 추구함으로써 평화와 공존 그리고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 새로운 정체성 구성의 방법과 과정은 참여민주주의에 기초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민간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분단시대의 새로운 정체성 구성문제에는 지역에 대한 그리고 세계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과 맥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빌리 브란트에게 유럽의 새로운 정체성과 유럽통합 그리고 세계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과 세계시민사회가 그러한 화두였다. 김대중에게는 동아시아 또는 유라시아공동체, 세계시민사회 그리고 지구민주주의 등이 그러한 개념이었다. 빌리 브란트가 깊은 관심을 가진 유럽통합 현상을 구성주의 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전쟁의 원인이 되는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들의 관계로서의 유럽이라는 구조와 이러한 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진 행위자들의 상호 작용으로 유럽의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이다. 현재의 유럽통합 국면은 국가주의 정체성과 초국가주의 정체성이 서로 긴장관계를 이루면서 상호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김대중에게 이러한 유럽통합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위해 대단히 중대한 타산지식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민주주의관과 분단극복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구성주의 이론의 유효성을 강조할 수 있다.

## 2.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및 의사소통행위 이론과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새로운 정체성 구성 전략

다음 장들에서 설명하듯이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은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이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여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공론장 및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입론한 하버마스의 관련 개념들을 검토하고 이에 의거하여 브란트와 김대중의 정치철학과 정책을 분석해 보는 일은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하버마스가 말하는 공론장(Öffentlichkeit, public sphere)은 공정한 의사소통을 통한 정치적 의사 형성과 의지 형성의 장이다. 하버마스가 상정하는 공론장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장이다. 하버마스가 그의 공론장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인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부르주아 사회의 카테고리로서 공론장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의 실증적

13) 오디 클로우츠·시실리아 린치 저/손혁상·이주연 옮김, 앞의 책(2011), 116쪽.

역사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대상 시기의 현실이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무엇보다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의 공론장 관련 저서는 후에 출간된 의사소통행위 이론(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관련 저서와 연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이 공론장의 전개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역으로 민주주의 발전은 공론장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공적 토론이 보장될 때 보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sup>14)</sup>

그는 한 사회내의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ife World)<sup>15)</sup>를 상정했다. 체계는 화폐와 권력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지배층이다. 생활세계는 보통의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장이다. 하버마스는 지배담론이 체계를 구성하고 강화시킨다는 관점을 표방함으로써 ‘언어로의 전환’ 관점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구성주의 이론들과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그는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경계하면서 생활세계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 다른 사회들의 생활세계들 사이의 소통을 또한 중요하게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트랜스내셔널 공론장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을 내다보았다. 이 과정들은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간주관성에 의한 끊임없는 상호구성 과정이었다.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된다는 것은 소통의 공론장을 통해 구성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구조와 행위자, 행위자와 행위자, 행위자와 구조의 상호구성이 ‘간주관성의 소통(communication of intersubjectivity)’<sup>16)</sup>에 의한 공론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간주관성의 소통이란 공론장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

14) Jürgen Habermas, *Strukturalismus der Öffentlichkeit*, Hermann Luchter hand Verlag 1962, 5. Auflage (1971);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I,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15) 김창호,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 김재현 외 저,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 주제와 쟁점들』(나남출판, 1996), 177-200쪽.

16) 간주관성을 상호주관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학계에 이미 간주관성의 용어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필자도 이에 따른다. ‘상호주관성’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김창호, 같은 논문(1996)에서도 볼 수 있다.

들이 각자의 주관성을 인정받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실현하는 가운데 다른 주관성들과 공정하게 상호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절에서 언급한바 대로 하버마스가 구성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버마스는 유럽의 공론장으로서 유럽통합의 의미와 추진력을 강조했다.<sup>17)</sup> 공론장의 기능을 통하여 유럽통합은 민주주의 결핍을 극복할 수 있으며 참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유럽의 공론장은 유럽차원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의 공론장이 상호 소통하여 유럽 전체의 공론장을 형성해 가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sup>18)</sup> 왜냐하면 정치, 사회적 실행력을 갖는 유럽차원의 공론장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그 실현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체계 간의 소통만이 아니라 생활세계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생활세계 간의 소통이 진정한 유럽시민사회를 실현하는 유럽통합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각 국가 차원의 공론장이 소통을 통해 유럽 전체의 공론장으로 재구성되는 맥락에서 트랜스내셔널 공론장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트랜스내셔널 공론장의 개념을 같은 논리에서 세계시민사회의 또는 세계정부의 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임을 설파했다.

바로 이러한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앞에서 소개한 구성주의 이론과 함께 빌리 브란트<sup>19)</sup>와 김대중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분단극복 정책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는 것이다.

---

17) Jürgen Habermas 저/윤형식 옮김, 『아, 유럽. 정치저작집』 11(나남, 2011); Jürgen Habermas, *Ach, Europa, Kleine Politische Schriften XI*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8).

18) *Ibid.*

19) 브란트와 하버마스 사이에 교류가 없었고 브란트는 하버마스 이론을 그의 정책에 반영한 어떤 실마리도 남기지 않았다. 브란트는 수렴이론(Konvergenztheorie), 평화공존 논리에 관심이 많았고 그의 정책에 적용하였다. 하버마스는 브란트의 비판적 지지자였다고 할 수 있다. 브란트의 정책을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비추어 보는 것은 본 논문 필자의 시도이다.



### Ⅲ.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에 비추어 본 빌리 브란트의 민주주의 개념과 동방정책

#### 1. 민주주의 확대와 분단극복 방안의 교차점으로서 동방정책

빌리 브란트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상으로 취임한 후 첫 연방의회 연설의 (1969.10.28) 서두에서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Mehr Demokratie wagen).”라고 선언하였다.<sup>20)</sup> 이 연설에서 그는 동방정책으로 알려지게 되는 자신의 독일 분단극복 정책을 제시했다. 이것은 브란트가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던 것이고, 그 기반 위에서 동방정책이 실현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달리 말해 그는 동방정책을 통한 독일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전제 조건으로 서독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이를 동독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그는 또한 유럽통합을 진행시키고 있는 서유럽에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이 민주주의가 동유럽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브란트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여된 민족주의는 파시즘이며 민주주의가 결여된 반공주의는 합리성을 상실한 편협하고 왜곡된 당파주의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주로 반공 의식에 기초한 독일문제 해결 노력과 서유럽통합의 원동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sup>21)</sup>

그에 따르면 서유럽통합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의 극복의 결과여야 했다. 그는 서유럽통합을 독일이 민족주의와 나치즘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디딤돌로 생각했다. 이러한 서유럽통합은 유럽통합을 지향해야 했다. 독일문제는 이러한 유럽통합의 진행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했다. 그는 동독과 동유럽의 변화는 자체 내에서 그리고 외부로부터 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현실 사회주의의 동유럽권이 결합하고 있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그가 볼 때 동서 대

20) 그는 이 내용을 수상 취임 후 첫 정부선언에서 분명히 하였다.

Regierungserklärung des Bundeskanzlers Willy Brandt vom 28. Oktober 1969, in: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6, Willy Brandt, Ein Volk der guten Nachbarn. Außen- und Deutschlandpolitik 1966-1974, (Bonn, 2005), 236-246쪽.

21) 물론 동시에 그는 서베를린 시장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서방통합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소련의 의도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결구조는 민주주의 확대보다는 축소를 초래했다. 그래서 그는 대립보다는 화해·협력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며 분단과 동서 냉전의 문제해결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이는 그가 동방정책의 핵심을 민주주의의 확대로 본 것임을 의미한다. 브란트의 민주주의 개념과 이에 기초한 동방정책은 이러한 논리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접촉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라는 그의 동방정책의 구호는 이 논리를 상징했다. 브란트는 특히 오랜 동안 (1957~1966) 서베를린 시장을 역임하면서 동독 및 동유럽과의 대결 및 단절은 이 지역에서 인권 상태가 악화되고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져 감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버마스 개념을 빌리면 이 지역 내부에서 시스템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더욱 악화되어서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지는 것이었다. 그의 접촉을 통한 변화 개념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동서교류는 처음에는 정부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민간교류를 활발히 확대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즉, 처음에는 동과 서 사이에 시스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생활세계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해 서독과 서유럽이 먼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밖을 향해 열려 있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빌리 브란트 베를린 판본』 7권의 서문을 집필한 키제리츠키(Wolther von Kieseritzky)에 따르면, 브란트는 “시민권의 확대, 사회적 보호제도의 확충(Ausbau sozialer Leistungen)”과 같은 사회정책(Sozialpolitik)을 새롭게 펼치면서 그의 독일정책 및 외교정책과 연계·구성하고자 하였다.<sup>22)</sup> 즉, 그는 사회 정책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동방정책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동시에 기존의 민주주의 개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그 차원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것이 그가 강조한 ‘지속과 혁신(Kontinuität und Erneuerung)’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브란트가 민주주의를 동독과 동유럽으로 확장하고자 했을 때 그것은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명분을 가진 제국주의적 오만함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소통의 장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소통의 장은 앞장에서 설명한 하버마스의 개념을 빌린다면 공론장, 즉 의사소통행위의 장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22) Wolther von Kieseritzky, “Einleitung,” Band VII Berliner Ausgabe. “Mehr Demokratie wagen,” *Innen- und Gesellschaftspolitik 1966-1974*, 24쪽.

관련하여 키제리츠키(Wolther von Kieserizky)에 따르면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도록 독일시민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독일국민이 국내적으로 상호간에 그리고 외국인들과 좋은 이웃이 되게 만드는 것은 브란트의 근대화 계획(Modernisierungsplan)의 근간이었다. 여기에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았다.”<sup>23)</sup> 이 둘은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상호 깊은 연관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근대화계획은 앞에서 말한 지속과 혁신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했다

브란트의 중간 결과 보고(Halbezeitbilanz), 즉 제2 정부선언이라 할 수 있는 1971년 6월 투청에서 행한 연설에 따르면 각 개혁정책은 인간의 새로운 형성(Bildung des Menschen)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개혁정책의 실시는 앞에서 설명한 구성주의 이론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는 개혁정책을 통해 간주관성의 소통의 장을 확장하면서 참여민주주의 가능성을 확대하여 사람들의 의식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즉,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구성 과정을 통해 독일문제, 동서대결의 문제를 풀고자 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개혁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 자율, 자결, 사회적 연대를 온전하게 실현하면서 살고자 하는 의식을 드높이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그의 개혁정책은 노동자의 경영참여권을 늘리고, 극단주의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시행(Strafvollzug)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직업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확대하는 데 그 초점을 모았다.<sup>24)</sup> 그는 허구의 정보와 정체성의 사회적 기제(mechanism)를 지양하기 위하여 서독의 교과서들이 일방적으로 반공주의에 기반한 이념적 내용 서술을 지양하는 개선책을 제시하였다.<sup>25)</sup> 이는 국가의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하고 그 국가의 개입은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다.<sup>26)</sup> 브란트가 말하는 시민단체들은 조직(Organisation), 위원회(Räten), 조합연합회(Gremien), 협의회(Gesprächskreisen)의 형태를 띠었다. 이들은 하버

23) Wolther von Kieserizky, *Ibid.*, 24쪽; Band VII Berliner Ausgabe. “Mehr Demokratie wagen,” *Innen- und Gesellschaftspolitik 1966-1974*, Nr. 52.

24) Wolther von Kieserizky, *Ibid.*

25) Karl Bracher·Wolfgang Jäger·Werner Link, *Republik im Wandel 1969-1974, Die Ära Brandt* (Stuttgart·Mannheim, 1986), 129-137쪽.

26) Wolther von Kieserizky, *op. cit.*, 24쪽.

마스 개념에 의하면 공론장의 한 단위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회 거버넌스, 즉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심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을 실현해 갈 수 있는 행위 주체들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빌리 브란트는 구성주의 이론이나 하버마스 이론이 전제하는 간주관성의 소통에 의한 새로운 정체성 구성 이론의 실천가였다고 할 수 있겠다.

## 2. 동방정책의 기제로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 사이의 불가분의 상호 관계

그러면 브란트가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프랑스 혁명의 구호처럼 자유·평등·박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였다. 그는 “민주주의는 형식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sup>27)</sup>고 했다. 이 말은 사회·경제적 정책 목표와 결정들이 정치적 구조와 결정들처럼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민주적 질서는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들의 문제해결 능력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질서를 위한 의지 구성(Willensbildungsprozess)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다’라고 강조했다.<sup>28)</sup> 즉, 브란트는 민주주의는 어떤 고정되어 있는 구조적 상황(Zustand)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역동적 과정(Prozess)임을 강조했다.<sup>29)</sup> 브란트의 민주주의는 바로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 구성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점진적인 것이어야 했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그 효력 범위 내에서 역동적이고 열려져 있어야 했다. 즉, 그의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라는 구호는 점진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고 혁명적인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었다.<sup>30)</sup> 이는 달리 표현하여 브란트 정부의 제안이 진화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실현하고 ‘이념적인 눈가리개’ 없이 사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라는 조건아래서 정치적 자유가 실현될 때 개혁이 성공할

27) Willy Brandt, *Über den Tag hinaus. Eine Zwischenbilanz* (Hamburg, 1974), 267쪽.

28) Wolther von Kieseritzky, *op. cit.*, 26쪽.

29) *Ibid.*.

30) *Ibid.*.

수 있다는 그의 평소 신념을 대변해 주는 맥락이기도 하다.<sup>31)</sup> 이러한 맥락들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구성주의 이론 및 하버마스의 공론장과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가지고 조명해 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이 필자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특별히 강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1969년의 정부선언을 통해 브란트는 그 때까지 사회에서 요구되어 온 욕구들에 대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총체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모델로서 자유가 충만한 사회민주주의, 즉 민주적 사회주의를 제안했다.<sup>32)</sup> 그는 여러 곳에서 ‘사회민주주의(Sozialdemokratie)’와 ‘민주적 사회주의(Demokratische Sozialismus)’를 동일개념으로 사용했다. 브란트의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라는 이 구호는 구체적으로 에르하르트가 “구성된 사회(formierte Gesellschaft)”를 제안한 1965년 11월 10일 정부선언(Regierungserklärung)을 겨냥하기도 했다.<sup>33)</sup> 브란트가 보기에 에르하르트가 말하는 구성된 사회로서의 민주주의는 각종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기능을 하는 이미 구성된 그래서 고정된 개념이었다. 브란트는 에르하르트가 민주주의 개념을 대단히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Einhegung) 보았다. 그가 보기에 에르하르트의 민주주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장으로 그리고 그 행위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에르하르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는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 점을 당시 자주 강조하였는데 후에 1987년의 사민당 당수직을 사임하면서 행한 고별연설에서 상술해 주었다.

“내가 만약 평화 다음으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 한다면 절대적으로 그것은 자유다.”<sup>34)</sup>

31) *Ibid.*

32) Wolther von Kieseritzky, op. cit., 27쪽.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이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성주의 이론에서 핵심 사항 중의 하나가 사회와 제도 및 정책은 구조와 행위자의 끊임없는 상호 구성과정으로 파악하며 이들을 파악하는 방법도 이 과정을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33) Willy Brandt, Band VII Berliner Ausgabe. “Mehr Demokratie wagen,” *Innen- und Gesellschaftspolitik 1966-1974*, Nr. 36; *Verhandlungen des Deutschen Bundestages, Stenographische Berichte*, 5. Wahlperiode, Bd. 60, 19쪽.

34)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in der Bonner Beethovenhalle am 14. Juni 1987,” *Bedeutende Reden Willy Brandts,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Berlin*.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의 대서양헌장에 들어 있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 “궁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의 개념을 중시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소수가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리는 자유여야 함을 강조했다. 브란트는 “인간의 창의적인 능력의 자유로운 투입”과 “각 개인의 사회적 책임 안에서 행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sup>35)</sup> 그래서 그는 사회민주주의자로서 그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사회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는 점을 대단히 중요시 했다.

“경쟁과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수용은 상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업자적인 자율적 활동의 의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것을 하려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해서도 안 된다. 국가이념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sup>36)</sup>

그러면서 그는 자유에 대한 특정 계급의 독점적 지위를 주장하는 이념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 이론을 이 같은 논리에서 부정했다. “자유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은 것이다.”<sup>37)</sup>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는 자유, 시장경제, 기업가의 자율성, 거버넌스가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들이며 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결정이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자유의 개념을 공허하지 않게 하려면 자유의 개념은 의회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자유의 개념은 국가 기구들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기업에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경제 실체의 민주화를

35)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in der Bonner Beethovenhalle am 14. Juni 1987,” Bedeutende Reden Willy Brandts,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Berlin, 3쪽.

36)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5쪽. 이 점이 브란트가 지도적 역할을 하여 사민당이 1959년 고테스베르크 강령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사민당이 시장경제 원리 수용을 핵으로 하는 대중정당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37)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3쪽.

통해, 물질적 진보에 대한 사회적 인본주의적 통제를 통해, (지역)공동체 자치를 통해, 사회민주주의의 반성적 발전의 심화를 통해, 그들 기관들의 발전을 통해, ..... 우리의 미래는 관료주의의 비대나 기구들의 세력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 소비자, 공동체 시민들의 공동결정에 놓여야 한다.”<sup>38)</sup>

그는 이러한 정책 실현의 모델로서 그가 망명시절 경험했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를 제시했다. “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커다란 개방성을 배웠다. 나는 거기에서 국가체계의 민주화가 어떻게 진실되게 실현될 수 있는지 배웠다. 그러한 질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떠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지 배웠다. 나는 거기에서 현대 사회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다른 많은 사항들을 배웠다.”<sup>39)</sup> 이는 그의 실용주의의 관점과 그의 민주적 사회주의, 즉 사회민주주의<sup>40)</sup> 신념이 함께 녹아들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에 따르면 민주적 사회주의(Demokratische Sozialismus), 즉 사회민주주의(Sozialdemokratie)는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구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표상들의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이었다. 이 장에는 공동의 인생관이 기초로 깔려 있었다. 이 장에서 “자유·인본주의·법치국가·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했다.<sup>41)</sup>

그러면 브란트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그들 사의의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상호구성이었다. 시민들 사이의 소통에는 정부와 시민 사의의 소통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이를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상호 구성해 낼 것을 역설했다. 그는 중간층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허구적 개념임을 지적했다. 중간층이라는 개념은 시민들 사이의 조화의 결과물이 아니고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조작된 허구이며, 이 허구적 개념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보았다.<sup>42)</sup> 그는 참여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의 구성을

38)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6쪽.

39) “Brandt im Interview mit Günter Gaus am 25. September 1964,” zit. nach Berliner Ausgabe, Bd. 4, Nr. 54, 315쪽 f. 괄호 안은 필자가 보충한 것임.

40) Helga Grebing, *Willy Brandt - Ein Leben für Freiheit und Sozialismus*, Schriftenreihe der Bundeskanzler Willy- Brandt Stiftung, 4 (Berlin, 1999).

41) “Rede Brandts auf dem Parteitag der Berliner SPD am 8. Mai 1949,” zit. nach Berliner Ausgabe, Bd. 4, Nr. 5, 129쪽.

바로 이 허구의 부조리를 교정하는 참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sup>43)</sup> 필자는 이러한 브란트의 관점에 하버마스가 공론장을 통해 말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가치와 구성주의 사회 인식 및 구성 방법이 엮여져 함께 녹아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브란트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라고 하는 구호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에서, 예를 들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석탄·철강 산업에 국한되었던 노동자의 경영참여권, 즉 공동결정권(Mitbestimmungsrecht)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였다. 가족법과 결혼법을 사람들의 고통 완화, 즉 인권의 차원에서 합리화했다. 낙태법 개정을 시대 현실에 맞게 낙태를 일정 조건과 함께 허용하는 쪽으로 실현하였다. 계획을 통한 국가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 계획을 시민참여를 통해, 즉 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수립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그의 신념을 실천하는 효과를 낳았으며, 시민참여주의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이루었다. 시민과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쌍방향 소통을 위해 수상 비서실에(Kanzleramt) 컴퓨터를 도입하였다. 정보의 쌍방향 소통과 이에 의거한 거버넌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계획을 시민 참여 속에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청원(Bürgerinitiative) 제도가 운영되었다.<sup>44)</sup> 교육개혁은 지식, 정보, 문화를 공유하고 일과 의사표시를 통해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sup>45)</sup>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세계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신나치주의를 표방하는 정당 및 폭력혁명을 피하는 극단주의자들의 발호를 막기 위해 ‘극단주의자 처벌법’이 제정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신나치당인 독일국가민주당의 발호와 적군파(Rotarmee Fraktion)의 테러 문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극단주의자들의 발호를 잠재우는데 크게 작용하고 서독을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면서 서독인들 사이의 상호 소통과 상호구성 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이 정책들은

42) Richard Schröder, Impulsvortrag. “Mehr Demokratie wagen” 1969 – “Mehr Freiheit wagen” 2005, Willy-Brandt-Gespräch 2006. Orientierungen für eine Gesellschaft im Umbruch?. Vortrag und Podiumsdiskussion am 10. Oktober 2006 im Festsaal des Roten Rathauses in Berlin, Schriftenreihe der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eft 14, 14쪽.

43) *Ibid.*

44) Richard Schröder, op. cit., 14-15쪽.

45) *Ibid.*



1968년부터 시작된 소위 '68운동'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동독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서독을 더욱 매력적인 사회로 보일 수 있게 하는데 기여했다.<sup>46)</sup> 이러한 내적 민주주의 개혁을 그는 동서 관계를 개선하는데 적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키제리츠키(Wolther von Kieseritzky)가 지적한 브란트의 내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독일정책 및 외교정책과의 연계정책 이었다.<sup>47)</sup> 이는 브란트가 독일과 유럽 평화의 설계도인 동방정책을 민주주의의 확대에 기초해서 실현하려고 했음을 의미한다. 그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불가분의 관계로서 엮고 있으며, 두 차원이 상호 견인하는 가운데 동방정책의 기제역할을 했다. 브란트는 민주주의의 이 두 차원을 '정치적 인권(politische Menschenrechte)'과 '사회적 인권(soziale Menschenrechte)'이라는 개념으로 각각 함축적으로 표상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 3. 민족을 위해 민족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상호 구성 과정으로서 동방정책과 유럽통합

그런데 브란트는 '민주주의가 평화정착을 견인한다'는 논점의 반대 방향을 또한 강조했다. 이는 '평화가 정착될 때에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측면인데, 그에게 있어서 평화체제의 구축은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전제조건이었다. 브란트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를 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평화였고, 민주주의 제도는 또한 평화를 진척시킬 수 있는 기초였다. 브란트에게 있어서 평화가 민주주의보다 더 우선적인 개념이었다. 그는 민주주의가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가운데 민주주의 확대는 그 평화를 사회·구조적으로 견인한다고 보았다. 이는 브란트가 민주주의와 평화의 역사발전을 위한 상호 구성관계를 지적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

46) Karl Bracher·Wolfgang Jäger·Werner Link, *Republik im Wandel 1969-1974, Die Ära Brandt* (Stuttgart·Mannheim, 1986), 129-153쪽; Gregor Schöllgen 저/김현성 옮김, 『빌리 브란트』(빛살무늬, 2003), 170-180쪽.

47) Wolther von Kieseritzky, op. cit., 24쪽; Band VII Berliner Ausgabe. "Mehr Demokratie wagen," *Innen- und Gesellschaftspolitik 1966-1974*, Nr. 52.

르면 평화는 민주주의에 의해서건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이건 무조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했다. 민주주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전쟁을 도발·수행하는 정책 방식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평화는 정치적 군사적 대결을 피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삶의 불평등과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를 해결하는데서 얻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전쟁이 없는 그리고 이러한 사회구조적 부조리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48)</sup>

“평화를 위한 투쟁과 인권을 위한 분투는 서로 땀해야 땀 수 없는 사회적 노력들이다.”<sup>49)</sup>

그에게 있어서 사회적 인권과 정치적 인권은 땀해야 땀 수 없는 관계였고, 사회적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속에서 동독과 서독,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불가능한 공동의 이해는 배제하고 가능한 공동의 이해를 찾는 것이 동방정책이었다.<sup>50)</sup> 이러한 동방정책은 민주주의 유럽통합의 발전과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로 맺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해 독일 시민들이 독일에 국한된 사고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전체의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1964년 사민당 총재 취임연설에서도 “지금이 유럽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sup>51)</sup>라고 강조했다. 1987년 총재 이임연설에서는 앞의 취임연설에 대해 첨가하고 싶은 말로서 “독일인에게 전체적인 분야에서 유럽통합 없이, 유럽통합에 반해서 전혀 미래가 없다”<sup>52)</sup>는 점을 재삼 강조했다. 유럽차원을 생각한다는 것은 평화와 민주

48) Bernd Rother, “Entwicklung ist ein anderes Wert für Frieden,’ Willy Brandt und der Nord-Süd-Konflikt von den 1960er bis zu den 1980er Jahren,” in: Jost Dülffer und Gottfried Niedhart (hrsg.), *Frieden durch Demokratie?, Klartext Verlagsges (Mbh, 2010)*, 257-269쪽.

49)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rsg.), *Friedensnobelpreis für Bundeskanzler Brandt* (Bonn, 1971), 85쪽.

50) Bernd Rother, op. cit., 268쪽.

51)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24쪽에서 재인용.

52)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24-25쪽.

주의를 위해 유럽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했다. 브란트는 유럽차원의 안보, 유럽차원의 이익만이 독일의 진정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유럽의 안보를 위해 이익을 위해 독일이 헌신하는 것은 독일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1987년 사민당총재 이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나는 민족의 생존 차원에서 강력히 경고해왔다. 동서 갈등이 군사적 폭발로 이어지면 어떤 상황이 되겠는가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 내가 1970년 에어푸르트(Erfurt)에서 말한 것 ‘독일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 이에 기초한 양 독일의 평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사람을 위한 양 정부의 합의, 양 독일을 넘어서는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이 발전의 단계에서 국가적(민족적) 차원의 것이었다. 아마도 내용 없는 통일의 수사보다 훨씬 국가(민족)를 생각하는 것이었다.”<sup>53)</sup>

이어서 그는 “평화에 대한 가치와 유럽에 대한책임의 의식과 함께 국가의 일을 한 것은 민주적 좌익들이 잘 했다. 오늘날에도 유럽통합의 대 과업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sup>54)</sup>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차원에서의 정체성을 유럽적 차원의 정체성으로 새로운 구성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구성으로 이해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가 경쟁상태 또는 적대국일 때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다른 공동의 이해관계가 구성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측면은 구성주의 이론에서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 구성을 통해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논리를 예증해 주는 사례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필자는 본다. 이러한 측면과 연계하여 우리는 브란트가 그의 동방정책을 평화정책으로서, 유럽 내의 긴장완화, 군비축소와 협력, 유럽의 자율권 신장, 동서 유럽 사이의 균형, 인권과 정의와 이성을 향한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하는 것<sup>55)</sup>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과 이해관계의 새로운 구성을 방법론적으로, 목적론적으로 추구하는 동방정책은 이전의 선언적인 독일정책에서 구체적인 독

53)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21쪽.

54) *Ibid.* 괄호 안은 필자가 보완하였으며, 여기에서 좌익은 사회민주당을 의미한다.

55)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20쪽.

일정책으로의 변신을 꾀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sup>56)</sup>

앞에서 말한 대로 그는 진정한 유럽통합은 민주주의 기반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유럽공동체(EC)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데에 앞장섰다. 그는 유럽차원의 민주주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꾀할 수 있는 사회정책들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EC 내 낙후된 지역의 지원을 위한 지역정책(Regional Policy), 공동의 환경정책, 사회정책, 에너지 정책 등 EC의 여러 공동 정책들을 수립하는 데 힘썼다.<sup>57)</sup> 이는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라는 취임 후 첫 정부선언에서 밝힌 정책 기조와 일치되는 유럽공동체를 위한 민주개혁의 일환이자 공동체의 조화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브란트의 유럽통합 정책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 유럽통합을 유럽차원의 공론장 형성으로 본 하버마스의 개념과 그 발상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브란트는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하버마스와 깊은 교류를 갖지 못했고 공론장 및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그의 정책과 연관하여 언급한 적은 없다. 그는 그의 정책의 이론적 바탕으로 주로 갈브레이드(John Galbraith), 소로킨(Pitirim Sorokin) 등의 수렴이론을 적극 채택하였다. 그런데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브란트가 채택한 방식의 수렴이론이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 및 구성주의 이론과의 연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수렴은 상호 소통과 상호구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독과 동독, 서유럽과 동유럽은 그들의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넘어 평화와 인권을 위해 민주주의 방법으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했다. 평화와 인권을 위해 민족과 국가를 넘어 초국가적으로 유럽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유럽통합이 이루어지듯이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를 넘어 평화와 인권을 위해 유럽 전체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했다.<sup>58)</sup> 서독과 동독,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의 접촉에 있어서 처음에는 정권 차원에서 그 다음에는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이니셔티브가 취해져야 했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버마스가 말하는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의 의사소통이 생활세계와 생활세계 간의 의사소통으로 전이되는 것과 같은 맥락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공산주의 독재정권과의 대화와 협

56) *Ibid.*

57) Desmond Dinan, *Europe Recast. A History of European Union* (Boulder·London 2004), 145-154쪽.

58) Willy Brandt, *Friedenspolitik in Europa*, Frankfurt (a.M.), 78쪽.

력을 그 정권에 대한 인정과 강화라고 보면서 동방정책을 비판하는 견해는 피상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사소통이 심화되면서 공론장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결한 동독 및 동유럽 사회가 내부에서부터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란트는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59)</sup>

#### 4. 유럽을 넘어 세계를 향한 소통과 상호구성의 확대 과정으로서 동방정책과 유럽안보협력회의의 그리고 남북위원회

위와 같은 이론적, 사상적 바탕에 근거해서 그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그의 입장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실현은, 후에 명명된 '헬싱키 프로세스'<sup>60)</sup> 동서 간에 서로의 불안감을 줄이고 동과 서 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또한 동시에 이는 동독과 동유럽 지역에 인권개념을 도입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방법이고 과정이며 또한 제도였다. 그의 수렴이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가 보기에 CSCE 추진정책 또한 공론장의 개념과 구성주의 이론이 함께 녹아들어 가 있는 발상이었다. 이 유럽안보협력회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국가들은 그 전제조건으로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고 동독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을 오더-나이제 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 일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도 바라는 사안이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실현을 통해 독일문제 해결을 추진한다고

59) *Akten zur Auswärtigen 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1), 115-123쪽; Werner Link, "Außen- und Deutschlandpolitik in der Ära Brandt 1969-1974," in: Karl Bracher·Wolfgang Jäger·Werner Link, *Republik im Wandel 1969-1974, Die Ära Brandt* (Stuttgart·Mannheim, 1986), 169쪽; Gottfried Niedhart, "Revisionistische Elemente und die Initiierung friedlichen Wandels in der neuen Ostpolitik 1967-1974,"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28 (2008), 233-266쪽.

60) 헬싱키프로세스라는 구성과정으로서의 개념은 브란트가 제안하고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신인아, 「서독 신동방정책의 의의와 남북관계에 주는 교훈」, 박경서·서보혁 외 지음,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한국학술정보주, 2012), 124쪽.

할 때 이는 서독이 받아들여야 할 전제조건이었다. 브란트는 이를 수용하고자 했으며 이를 진정한 독일의 과거청산 의지의 표현으로 자리 잡게 하고자 했다. 그는 우선 서독의 유일대표권 주장이 동독과 동유럽을 대화와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슈타인독트린을 포기하였다. 그동안 서독의 유일대표권이라는 지배담론을 포기하고 1민족 2국가 담론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상호 배제’에서 ‘상호 포용’으로의 정책적 전환의 길을 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성립은 브란트의 이러한 동방정책의 목표와 실천의지 및 그 방법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그의 평화와 민주주의 사상 그리고 과거청산에 대한 진정한 의지는 브란트에게 서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세계적으로 큰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sup>61)</sup> 이러한 신뢰는 다시 그의 정책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뢰가 서독 내부 정치적으로도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지렛대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시대라면 독일 국가의 영토를 축소를 뜻하는 오더-나이제 국경선의 인정을 독일 사람들이 추호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유럽적·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민주주의 시민으로 새로 구성되는 독일인들은 이를 통한 분단극복과 영구평화를 지향하면서 위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이러한 구성과정을 통해 유럽인들은 서독을 진정한 서유럽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유럽 전체의 통합(진정한 유럽통합)을 추진할 수 있었다. 서독과 서유럽에서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새로운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구성되어 갔으며 전체 유럽차원의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구축되어 갈 수 있었다.

이러한 서독은 구체적으로 서유럽통합에 한정된 유럽공동체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에도 그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을 위해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적을 이기기 위한 또는 타도하기 위한 경제 및 안보 공동체 역할에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과 함께 집단 경제·안보 체제를 이룰 수 있는 기구로 그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데 기여를 했다.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통해 동서 간에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CSCE의 인권조항은 동독과 동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에 큰 지원세력이 되었다.<sup>62)</sup> 이 지역의 수정주의 세력(동독의 비어만과 같은 탈

61) 신인아, 앞의 논문(2012), 124쪽.

62)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은 직접적으로 동독의 민주화에 기인했다는 측

소련화 지향 민주화 운동 세력)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sup>63)</sup> 동독 및 동유럽의 정권들이 이 세력을 이전처럼 마음대로 억압할 수 없게 되었다.<sup>64)</sup> 이것은 대결적인 자세로 외부에서 인권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는 동유럽 지역의 인권촉진 정책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사회변화였다.<sup>65)</sup> 브란트는 동방정책과 CSCE 정책에서 동독과 동유럽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먼저 모색함으로써 그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고, 유럽문제 해결의 튼튼한 소통의 장을 위해 그리고 상호구성 과정을 위해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내의 중립국들을 포함하여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안보협력회의와 유럽통합 과정 등은 세계의 통합으로, 세계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그 길이 열려있어야 했다. 그는 공동의 안보 개념은 동서관계의 유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북반구에 해당하는 산업 국가들과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들 사이에 내재하는 긴장 및 갈등관계인 남북문제에도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는 세계가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비군사 부문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가 그동안 이끌어 온 국제 남북위원회는 여기에 주력했다. 이러한 관점이 그동안의 어느 때보다도 현재 개발원조정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sup>66)</sup>

그는 세계도처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남반구의 가난한 국

면에서 볼 때 이 변화는 중요했다.

- 63) 우평균,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서독관계 변화」, 박경서·서보혁 외 지음,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한국학술정보㈜, 2012), 270쪽 및 272-273쪽.
- 64) 고가영, 「헬싱키 협정의 이행과 소련의 인권운동」, 박경서·서보혁 외 지음,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한국학술정보㈜, 2012), 243-251쪽.
- 65) 브란트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Mehr Demokratie wagen).”은 동독에서 큰 기대의 반향을 일으켰다. 예를 들어, 2013년 현재 독일의 수상인 그리고 1969년 동독시민이었던 Angela Merkel이 2005년 기민당-사민당 대연정을 통해 수상에 취임할 때 행한 정부선언에서 브란트의 연설을 “당시 동독 사람들은 귀에 음악이 들려오는 것처럼 들었다”고 술회했다. 2005년 Regierungserklärung. 당시 동독 시민이고 후에 사민당 당원이 된 쉬뢰터 교수는 그 연설을 “사막에서의 물과 같았다”라고 술회했다. Richard Schröder, op. cit., 13쪽.
- 66)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26쪽.

가들의 진정한 개발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그 개발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전제였다.

“무장을 위해서 허비하지 않는다면, 개발을 위한 돈을 저개발 국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가능하다. 많은 정부들이 계몽된 여론의 압력에 굴하게 될 때, 국제 국가공동체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안보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세계 불안의 근본 원인은 부유하고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현저한 차이에 기인한다.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부조리 그리고 대규모의 기아가 세계사회의 불안전성과 전쟁위험의 원인이다”<sup>67)</sup>

세계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생존이 보장되고 공동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개발정책의 실현을 위해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가난한 지역의 국가들에게 진정한 지원이 주어져야 했다. 이것을 위해 세계여론, 즉 하버마스 개념에 의하면 각 국가들의 그리고 세계 공론장의 힘이 발휘되어야 했다. 이것은 하버마스가 상정한 세계시민사회 형성의 과정이고 기제였다. 그런데 브란트는 특히 평화와 민주주의의 세계시민사회를 위해 유럽 공동의 역할을 강조했다. 새로운 유럽 공동의 정체성과 이해관계의 본질이 여기에 놓여 져야 했다. 그는 세계시민으로서 유럽인을 상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을 통해 유럽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문제 해결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 IV.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 비추어 본 김대중의 민주주의 본질과 그에 기초한 분단극복 정책

##### 1. 분단의 구조와 김대중의 도전 그리고 상호 구성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풀려난 한국은 세계적인 냉전의 진전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것은 독일처럼 전범으로서 쫓겨났을 치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강대국들의 세력범의(Influence Sphere)

67)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26쪽.



각축 속에서 희생된 결과였다. 그 가운데 북한의 남침으로 6·25라 불리는 극히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내전을 치렀다. 이 내전은 휴전 협정을 통해 종식되었지만 이후 비극과 원한의 기옥과 이에 기초한 남과 북의 적대관계는 대한민국(남한)의 정치·경제·사회 동력의 구조적 골격을 이루었다.

대한민국(남한)에서 유일대표권의 주장은 신성불가침의 원칙이 되고 북한은 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는 괴뢰집단일 뿐이었다. 내전의 후유증과 그 기억으로 인한 고통은 북한의 재침에 대비한 안보의 가치와 반공의 이념을 최우선의 시대정신 및 정체성의 근간으로 받아들여지게 했다. 국가와 사회의 최우선 이해관계는 바로 이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정권의 “선건설 후통일” 정책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정책의 논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제약될 수밖에 없고 통일에 대한 추구도 미룬 채 안보에 역점을 두고 반공의 이념 속에서 일치 단결하여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한다는 담론을 의미했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라는 독재를 구축할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담론에 근거했다. 앞에서 설명한 구성주의 이론에 의거하면 이 담론이 사회구조의 근간으로서 ‘지배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은 “선민주화 후통일”의 담론을 제시하면서 내전을 겪은 분단국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에 기초해서 정치·경제·사회를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바탕위에서 평화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해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그의 평화적인 통일정책은 북한이라는 실체를 인정하면서 대화와 교류에 기반을 두었다. 이는 지배담론에 기초한 구조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때문에 그 정책적 구상은 큰 박해를 받았다. 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유일대표권 원칙에 위배되고 반공 이념에 기초한 안보우선의 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독재 권력에 저항하여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진정한 반공이 가능하고 정치·경제·사회 발전과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논리와 사상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헌신에서 필자는 앞에서 설명한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과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을 읽을 수 있다고 보며, 빌리 브란트의 사상 및 정책과 매우 깊은 유사점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김대중의 “선민주화 후통일”론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의 선결조건으로서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나아가 김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정책적 구호에서보다도 민주화 투쟁에 헌신한 삶에서 확인된다. 이 측면에서도 나치에 반대한 저항투쟁에 투신했던 빌리 브란트의 것과 더욱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게 한다.

## 2. 공론장에 의거한 구성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개념과 통일정책

김대중은 역사의 진행과정을 토인비(Arnold Toynbee)의 도전과 응전의 사관(史觀)을 가지고 보았다. 김대중은 토인비의 『역사연구(A Study of History)』를 탐독했고 토인비를 자신의 사상적 스승이라고 까지 밝히고 있다.<sup>68)</sup> 김대중은 주어지는 도전에 대해서 어떠한 응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토인비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응전의 방식과 과정이 역사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응전의 방식과 과정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가치를 강조했다. 즉, 그는 가장 최선의 응전은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민주주의 발전 자체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파했다.<sup>69)</sup> 그는 이러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모순과 대립 속에 조화 발전하는 변증법적 통일’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역사 인식을 그는 ‘창조적이고 변증법적인 통일의 철학’<sup>70)</sup>으로 이해했다. 필자가 볼 때 이러한 그의 역사 인식의 틀은 그의 저작들의 전반을 꿰고 있다. 이 관점은 그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투쟁과 삶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에서 사상적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다. 필자는 김대중의 이러한 사관 속에는 하버마스가 인류 역사의 발전을 위해 공론장 이론 및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통해 추구한 참여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역사를 구조와 행위자 간의 상호구성 과정으로 파악한 구성주의 이론이 함께 녹아들어 가 있다고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사관과 그의 정치적 삶과 정책은 간주관성 소통의 공론장을 통해 행위자들이 도전의 내용을 파악하고 응전의 내용과 방법을 합의해내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응전은 구조로서의 도전과 끊임없는 상호 구성 과정에서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구성해낸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68) 김대중, 『옥중서신』, (도서출판 한울, 2000, 제1쇄; 2009, 제3쇄), 94쪽.

69) 김대중, 『옥중서신』, 93-99쪽.

70) 김대중, 『옥중서신』, 33쪽.

대중은 평소 자주 분단비극이 그로 하여금 통일에 눈뜨게 했다고 술회했다.<sup>71)</sup> 필자는 이를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구성’의 한 측면으로 해석한다.

김대중은 경제발전을 포함한 근대화 작업은 반드시 민주주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1950년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이미 주장했다. 그는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한 감옥생활 중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옥중서신)에서 이러한 관점들을 여러 사례들을 들어 상세히 체계적으로 개진해 주었다.<sup>72)</sup> 예를 들어 그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상술했다. 그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독일과 일본이 민주주의와 함께하지 못한 근대화를 진행한 결과 독재의 파시즘 체제로 달려갔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결국 패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전후에 이들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나서 큰 성공을 이루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sup>73)</sup> 그 성공의 이유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주었다

“언론, 기타 국민의 기본자유가 보장되고 국민 참여의 정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불만이나 욕구가 여론으로 자유롭게 형성되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정치적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sup>74)</sup>

71)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한길사, 1994, 제1쇄; 2009, 제4쇄), 458-465쪽.

72) 필자는 김대중의 『옥중서신』이 김대중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사료라고 생각한다.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그리고 무기징역수로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 당시 그곳 감옥에서는 글을 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충분히 글을 써서 다듬고 할 수 있는 도구적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주는 봉합 엮서 한 장에 빼곡히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을 써넣어야 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로서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무기징역수로서 무슨 일을 도모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앙고백과 가족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의 인생관·세계관·역사관 그리고 정치관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가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부인 이희호에게 주문한 책들을 보면 당시 그의 주된 지적 관심이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독서 스펙트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읽는 그의 사상의 편린들이 후의 그의 저작들과 진술들에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이 『옥중서신』의 내용들은 또한 이전에 그가 개진한 견해들을 많은 독서와 함께 보다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자신이 그렇게 말한다. 이 서신 내용들 전체에서 그가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브란트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73) 김대중, 『옥중서신』, 313쪽.

74) 김대중, 『옥중서신』, 313쪽.

이러한 그의 역사 해석 관점은 하버마스가 그의 공론장 개념과 의사소통행위 이론에서 추구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목적의식과 일치하고 있다. 김대중은 이어서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들 국가들에서 “부의 공정분배와 복지국가의 이상이 실현되어”<sup>75)</sup> 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 덧붙였다.

“부의 공정분배는 단순히 사회정의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분배된 부가 구매력으로서 두터운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핵심인 확대 재생산을 위한 기여를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sup>76)</sup>

바로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의 성공적 발전이 이들 나라에서 진정한 반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리하여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붕괴의 필연적 이유로서 지적한 생산과 소비의 부조화로 인한 유효한 자본순환의 좌절, 경쟁의 격심으로 인한 이윤의 감소, 노동자의 계속된 궁핍화로 인한 혁명의 발발 등은 한낱 공상소설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이 나라들의 자유와 빵을 아울러 향유한 근로자와 국민 일반도 공산주의를 근본적으로 외면하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sup>77)</sup>

그는 이 교훈을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창했다.

“공산주의자와 국토의 양분 가운데 대결하고 있는 우리는 이 절실한 역사의 교훈에서 불패와 승리의 길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sup>78)</sup>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경제발전과 실효 있는 반공의식을 통해 대한한국 사회를 강건하게 하고 우방국들과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위협을 극복하고 이 세계를 공산주의 지배로부터 구출할 우리의 나 아갈 길은 명백합니다. 즉 자유세계의 지도 국가들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75) 김대중, 『옥중서신』, 313쪽.

76) 김대중, 『옥중서신』, 313쪽.

77) 김대중, 『옥중서신』, 313-314쪽.

78) 김대중, 『옥중서신』, 314쪽.

신념을 재확인하고 이를 비공산 세계 전반에 실현되도록 격려함으로써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모든 비공산 세계의 국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반대할 분명한 이유를 줄 것, ..... 서방 강대국 내의 대공산권 경제정책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재조정을 이루어서 적전 반란 또는 이적행위를 근절할 것, 히틀러의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독재자의 위협 앞에서 유향적이거나 굴복적 자세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재각성할 것 등입니다.”<sup>79)</sup>

그는 이러한 안보체계 속에서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련 및 중국과 수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러한 강건한 대한민국 사회와 주변 4대국 보장에 의한 안보의 틀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결한 북한과 평화적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여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난 1971년의 대통령 선거 때 나의 경제발전 정책을 책자로 소개하였고, 통일의 첫 단계로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와 교류를 주장했으며, 미·소·중·일 4대국을 평화통일회담 과정에 끌어들이어 통일의 실현 및 유지를 가능케 하자고 제안하였다.”<sup>80)</sup>

여기에서 그는 대화와 교류는 궁극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간적인 차원을 의미했다. 그 민간적 차원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서 정부 간 차원이 선행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앞장에서 설명한 브란트의 민주주의 확대론 및 동방정책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시사한다. 하버마스의 개념을 빌린다면 남과 북 간에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시작하고 이는 생활세계 사이의 대화와 교류를 이끌어 내야 했다. 김대중은 이러한 정책적 신념을 후에 ‘햇볕정책’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하였고 대통령이 되어서 추진하였다. 그는 그의 햇볕정책을 여러 측면으로 설명하였는데 다음의 것들은 민주주의와 관련한 내용을 예시해준다.

“공산국가가 이렇게 붕괴한 원인은 이미 지적한 대로 노동자들의 태업, 국민의 불신, 관료제도의 폐단 그리고 경제의 비능률성 등이지만 서방세계의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이슈이야기』의 원리다. 바람과 태양이 서로 행인

79) 김대중, 『옥중서신』, 263-264쪽.

80) 김대중, 「대중경제론」 서문(제1쇄), 『대중참여경제론』(산하, 1997, 제1쇄; 2009, 제4쇄), 9쪽.

의 외투를 벗기는 경쟁을 해서 결국 태양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 미국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태양의 정책을 썼다.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경제협력·문화교류·관광 등 모든 접촉을 하고 돈도 빌려주고 함으로써 개혁의 바람, 자유의 바람이 내부에 스며들게 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저 거대한 공산 제국이 밖으로부터 총 한 방 쏘지 않고 안으로부터 국민의 어떠한 반란 행위도 없었는데 소리 없이 침몰하고 만 것이다.”<sup>81)</sup>

그런데 이 전과과정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유가 있어야 시장경제의 발전, 특히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서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하게 되면 민주주의적 자유는 억제할 수 없게 됩니다.”<sup>82)</sup>

이러한 햇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착실히 정착하고 발전해야 했다. 이것이 “선민주화 후통일” 구호의 실질적 내용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독의 동방정책에 비교되는 햇볕정책은 남한의 민주주의 발전을 공고히 하고 북한과 경제 교류·협력 및 화해 과정을 통해 북한에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진입시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권 차원에서 접촉이 불가피하였지만 이는 곧 민간교류를 위한 기초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바로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하여 강조하면, 우리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앞의 브란트 동방정책과 유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하버마스가 말하는 시스템과 시스템의 의사소통이 생활세계와 생활세계간의 소통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비추어 조명할 수 있다.<sup>83)</sup> 그가 대통령이 되어 현대와 함께 추진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설립 같은 정책은 남북 생활세계 사이에 소통의 장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구성해 내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면 김대중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민주주의가 지도

81)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385쪽.

82)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64-65쪽(1993년 강만길 교수와의 대담).

8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브란트의 동방정책이나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동독과 북한의 독재정권을 인정하고 그 정권을 도와주는 효과를 준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하겠다.

자를 뽑는 방식 등의 주로 정치적인 형식과 제도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를 의미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by the people’이다. 국민의 충분히 자유로운 참여 없이는 국민의 이익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아니다.”<sup>84)</sup>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조선시대 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광조와 이율곡은 무엇보다도 언론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율곡은 ‘말의 길이 열리고 단협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이 결정된다(언로개색言路開塞 흥망소계興亡所係)’라고 했다.”<sup>85)</sup>

소통의 장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김대중은 공자시대인 2500년 전 중국 정나라의 자산의 언론자유에 대한 태도에 대해 극진히 생각하고 그를 추모했다.<sup>86)</sup>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김대중의 소통의 장에 대한 관점을 쉽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자산 당시 정나라에서는 마을마다 학교 건물이 있었는데 농민들은 농사일이 끝나면 밤에는 여기 모여서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하는 중 때로는 정부의 일을 비판도 하고 하였는데 자산의 부하들이 이를 금지하고 하였다.

그런데 자산은 이를 나무라면서 말하기를 ‘백성의 언론을 막는 것은 사회 불안을 막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길이 된다. 백성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그 불만이 내면적으로 쌓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만으로 토로할 길마저 막으면 안으로 축적되었다가 어느 땐가 한꺼번에 터지면 수습할 수 없는 큰 사회불안이 된다. 그러니 불만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그러한 불만의 토로는 정부로서도 아주 유익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치하기가 편한가? 그런데 지금 만일 백성의 언론자유를 막아버리면 정부는 귀머거리가 되고 백성은 원한과 불만으로 가득차서 들고 일어설 기회만 노리게 될 것이니 얼마나 위험한가? 절대로 학교에 모이는 것을 금할 일이 아니다.”<sup>87)</sup>

84) 김대중, 『옥중서신』, 266쪽.

85)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404-405쪽.

86) 김대중, 『옥중서신』, 330-332쪽.

김대중은 토인비도 자산을 언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88)</sup> 소통의 장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그의 신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그의 언급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이건 단체이건 어떤 조직사회이건 지배측과 피지배측 사이에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은 지배측이 종래에 발휘하던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지도 역량을 상실하였을 때 일어난다. 이러한 난국을 당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 지배측과 피지배측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통일안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무엇이 최선인가 만이 문제이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사회는 다시 생명력을 회복해서 전진한다.”<sup>89)</sup>

그는 역사의 승리를 위한 민주주의의 장점으로서 의사소통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개진하기도 했다.

“왜 민주주의를 하면 승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좌절을 했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정치를 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정부에 전달된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국정은 개선이 되고 만일 그것이 잘 안될 때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된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하지 않으면 위에서 아래로 명령만 내려갈 뿐, 아래로부터 위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민은 좌절하게 되고 적극적인 협력 대신 비협력과 저항의 길을 밟게 된다.”<sup>90)</sup>

민주주의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그는 사회·경제적 정의가 실현되는, 즉 사회적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적 제도와 방식을 의미했다.<sup>91)</sup> 그는 경제성장과

87) 김대중, 『옥중서신』, 331-332쪽.

88) 김대중, 『옥중서신』, 330쪽.

89) 김대중, 『옥중서신』, 316쪽.

90)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384쪽.

91) 그런데 브란트와는 다르게 김대중은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정당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일연방공화국과의 토양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6·25의 내전을 겪었고 서독과 같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명백한 제약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함께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 다시 말해 사회정의 없는 물질적 성장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가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가난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는 아무리 물질적 성장이 있더라도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sup>92)</sup>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신생 민주국가들의 현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였다.

“철사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는 요원한 상태인 것이 대부분 신생 민주국가들의 현실이다.”<sup>93)</sup>

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민주주의 발전 속에서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그의 이러한 주장은 후에 하버드대학교에서 『대중경제론』을 집필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는 대중경제의 핵심은 대중의 참여에 의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라고 보고 시장의 실패가 있는 곳에서 국가의 역할이 개입되어 사회정의를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sup>94)</sup> 그는 후에 이를 『대중참여경제론』<sup>95)</sup>으로 개명했는데, 대중의 참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대중경제론』이 『대중참여경제론』으로 이름을 달리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의 실질적 주체인 대중이 참여하는 경제야말로 참다운 민주적 시장경제이며,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임을 강조한 것이다.”<sup>96)</sup>

그런데 김대중은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의 뿌리가 서양에서 뿐만 아니라 아

92) 김대중, 『옥중서신』, 315쪽.

93)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385쪽.

94) 김대중, 『대중참여경제론』, 39-40쪽.

95) 그는 1983년부터 1984년 까지 1년 동안 하버드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초청 연구원(Visiting Fellow)로 연구생활을 하는 중 1971년 그가 대통령선거에 앞서 발표한 「대중경제 100문 100답」을 토대로 「대중경제론(Mass Participatory Economy)」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였다. 하버드대학교 출판사의 제안으로 이 논문이 보완되어 동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96) 김대중, 『대중참여경제론』, 39-40쪽.

시아에서도 일찍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했다. 그 사상의 핵심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람을 하늘처럼 대해야 하는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인여천(使人如天), 인권존중 사상이었다. 특히, 김대중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맹자의 사상과 민주주의의 인권 개념을 깊이 연결시켰다.<sup>97)</sup> 필자는 이러한 김대중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확대의 과정에 대해 차후에 설명 하듯이 구성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보고자 한다. 그의 민주주의 사상의 아시아적 뿌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일부 서구사람들이나 혹은 아시아 지도자들 중에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는 그 철학과 전통의 기반이 없으므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시아에는 훌륭한 민주주의 사상이나 이념, 이와 상통하는 정신과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제도화하지 못했고 그 제도를 서구로부터 도입한 것뿐입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상통하는 기본이념이 제기된 예를 우리는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300년 전에 유교에서 공자 다음가는 대사상이었던 맹자는 임금의 하늘의 아들인 천자(天子)이다, 하늘은 그의 아들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천자가 백성의 행복을 위한 통치를 하지 않고 나쁜 정치를 한다면 백성들은 일어서서 그를 쫓아낼 권리가 있다. 이렇게 방벌론(放伐論)과 역성혁명론(易姓革命論)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18세기 영국의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기본사상과 일치한 것입니다. 사회계약론은 근대민주주의의 기준이 되는 경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유교의 교리는 왕보다도 백성위주의 민본주의(民本主義)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심은 즉 천심이다(民心即天心), 하늘의 뜻에 순종한 자는 흥하고 이를 거역한 자는 망한다(順天者興 逆天者亡)라고 한 것도 유교의 교리입니다.

불교에도 뚜렷한 민주주의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성을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 이상 더 존귀한 것은 없다.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인권선언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을 높이 선양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이상 더 장대한 인권선언은 없습니다. 불교에서의 자비·보시 등이 유교의 민본사상과 상통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인 모든 만물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萬有佛性)는 것도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국민주권론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7) 김대중, 『옥중서신』, 139쪽.

우리 한국에서도 민족종교인 동학에서 그 창시자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 사람 섬기기를 하늘 섬기듯 해야 한다(事人如天)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절대적인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한 사상이 우리 아시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만 그의 집권은 정당화된다는 사상은 아시아에서도 서구와 같이 보편적인 것입니다.”<sup>98)</sup>

김대중은 아시아의 사상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 사상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 가치관이 될 수 있음도 설파했다.

“나는 특히 유교와 불교의 넓고 깊은 인(仁)과 자비(慈悲)의 정신과 도덕적 규범이 민주주의 발전의 정신적 원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이런 점에서 아시아에서의 민주발전이 서구사회를 포함한 세계 전체의 민주발전에 활력과 자극이 될 것으로 믿는다.”<sup>99)</sup>

### 3. 시·공의 확장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개념의 확대와 지속적인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

김대중은 민족주의의 문제와 민주주의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도 많은 사유를 하였다. 그는 민족주의는 민주주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주창했다. 그는 통일이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여야 한다고 했다.<sup>100)</sup> 그는 열린 민족주의를 ‘민주적 민족주의’로도 표현했다.

“민족주의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외적으로는 독립과 공존을 양립시킬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통합과 다양성을 병행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 없는 민족주의는 쇼비니즘과 국민억압의 도구가 되기 쉽다.”<sup>101)</sup>

98) 김대중, 「아시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말한다」, 1993년 12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자유민주 지도자회의’ 창립총회의 기조연설문, 『나의 길 나의 사상』, 511-512쪽.

99)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406쪽.

100)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390-392쪽.

101) 김대중, 『옥중서신』, 315쪽.

후에 그는 민족주의의 왜곡으로서 군국주의를 막아 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충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흔히 국가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충의 대상으로 하면 잘못하면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충의 대상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헌법에서도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충의 대상은 바로 내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내 이웃입니다. 그래서 충의 대상이 내 곁의 모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곧 나의 임금이 것입니다. 과거에는 임금이 주권자였지만 지금은 백성이 임금이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충을 바르게 하려면 민주주의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sup>102)</sup>

김대중은 다가오는 세계화 시대에 ‘열린 민족주의’를 갖지 못할 때 도태되어 버릴 것임을 경고하고 열린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민족통일을, 즉 민족공동체를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세계공동체·글로벌(우주)공동체를 구성해 갈 것을 제안했다.

“21세기에는 문자 그대로 지구촌 시대가 올 것입니다. …… 21세기는 세계인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류는 공통의 세계어로 대화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대량적인 이동이 행해져서 어느 나라든지 각 민족이 혼재하고 국제결혼이 성행할 것입니다. 민족의 특성은 보존되고 문화는 존중되겠지만, 이기적 민족주의 시대는 가고 세계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sup>103)</sup>

그는 다른 자리에서 “내 국민의 자유, 내 국민의 복지만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이제 한계에 온 것입니다.”<sup>104)</sup>라고 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그는 앞에서 설명한 브란트의 사상과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는 국가를 넘어서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계 시민사회를 내다보며 한국인의 정체성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국경을 넘어서 이웃과 세계를 포함한 민주주의가 되어

102) 김대중, 1999년 3월 18일 유럽들과의 만남에서의 강연, 『김대중 자서전』 2(삼인, 2011), 165쪽.

103) 김대중, 『옥중서신』, 107-108쪽.

104)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53쪽.

야 합니다. 통신·교통의 발달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국가의 민주주의로부터 주변 국가들을 포함한 연방제 민주주의 그리고 전 세계를 포함하는 세계적 민주주의, 이렇게 3종의 구조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EC를 거쳐 유럽연방의 정치적 통합까지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sup>105)</sup>

이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아시아는 이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역 내의 다자간 안전보장체제도 만들어야 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확실한 기구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 하루 속히 민주주의와 인권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안보가 튼튼히 확립되고 진정한 시장경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EC지역도 NAFTA지역도 모두 민주주의를 실시한지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를 서둘러서 성공시켜야 합니다.”<sup>106)</sup>

이와 관련해서 그는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에서 성공한 “헬싱키 프로세스 방식”을 아시아에 적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일찍부터 일본이 과거반성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졌으며, 한국인이 일본인을 반성할 수 있게끔 충분히 존경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sup>107)</sup> 그는 한국인이 추구해야 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건설할 문화는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겸비한 문화이다.”<sup>108)</sup>

김대중은 이러한 민주주의 세계공동체를 넘어서서 글로벌(지구)민주주의

105)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52-53쪽. 김대중은 1981년 9월 23일 옥중서신에서 집에 부탁하여 신용석의 유럽합중국을 읽고자 했다. 김대중, 『옥중서신』, 111쪽. 이는 그가 이미 초국가주의 유럽통합의 의미와 유럽합중국에 대한 개념을 접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106) 김대중, 「아시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말한다」, 1993년 12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자유민주 지도자회의’ 창립총회의 기조연설문, 『나의 길 나의 사상』, 512-513쪽.

107) 김대중, 『옥중서신』, 287-289쪽.

108) 김대중, 『옥중서신』, 349쪽.

공동체를 제시했다. 그의 글로벌민주주의를 환경민주주의라고도 칭할 수 있겠다. 그의 이 민주주의 개념은 서구 민주주의 이념의 한계성과 아시아의 자연관 또는 우주관에 기초하고 있다. 그의 글로벌민주주의는 환경민주주의라고 칭할 수 있는데, 인간과 자연의 조화 달리 표현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호 구성을 전제조건으로 그 철학 속에 담고 있다. 그는 이를 그의 신인도주의 사상으로 결집시켰다.<sup>109)</sup>

“근대 민주사회에서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은 생각했지만 우리의 어머니인 이 지구에 함께 생존하는 자연의 모든 생물과 존재들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수탈하는 것 등을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 왔다. 그들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가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한 것을 그들의 건전한 생존과 발전을 위한 책임의 부과로 생각지 않고 만물을 인간이 멋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것으로 오만된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이다. 물론 요즘 환경 문제가 인간의 안전과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되니까 환경보존을 들고 나오지만, 근대에는 기본적으로 자연 자체를 생각하는 철학이 미약했다고 본다.

아시아 문화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파악하는 특징이 있다. 서로 아끼고 같이 살아가야 할 동반자로 생각을 했다. 자연을 공경하고 자연을 어머니 같이 생각하면서 아끼고 보호해 왔다. 노자·장자의 가르침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특히 두드러진다. 부처님은 자연과 인간의 구별조차 하지 않았다. 자연 속에 생존하는 모든 존재들 속에서도 불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21세기 인류의 최대의 과제는 이토록 참담하게 파괴되고 상처받는 자연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생·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일만은 아니다. 자연 그 자체를 우리의 어머니요, 형제요, 분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는 오늘의 이 상태에서 자연과 화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번영해 나갈 수 없다. 인간을 위한 환경보존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의 공생과 공영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일대 혁명을 수반하는 민주주의는 수천 년 내 모든 천하를 구별 없이 포용해 왔지만 자연과 일체 속에 살아온 사상적 토양을 가진 아시아에서 창조되고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sup>110)</sup>

그는 이러한 사상에 기반하여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인도주의를 제창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국가 내에서의 자유와 정의의 완전한 실현”, “제3세계

109)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405-408쪽.

110)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407-408쪽.

의 모든 민족과 국민에게 선진국과 똑같은 자유와 번영과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 “이 지구상에 있는 들짐승·날짐승·물고기·공기·물·흙·나무와 들판에 나라는 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들의 생존권을 사랑과 속죄의 심정으로 보장”을 제시했다.<sup>111)</sup>

지금까지 보듯 김대중은 내전을 겪은 분단국에서 일정기간 민주주의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선건설 후통일” 같은 논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민주주의만이 경제건설과 통일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러한 분단국에서의 민주주의 역할에 대한 그의 주장은 글로벌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이는 김대중 스스로 사유와 행위라는 관점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분단국은 민주주의를 제약당할 수밖에 없는 객체가 아니라 글로벌민주주의를 실현해 낼 수 있는 촉매의 주체로 구성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주창하며 글로벌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남과 북의 증오와 적대감은 우주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분단국의 정치 지도자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해 내고 분단국의 역할과 운명을 새롭게 구성해 내는 사유와 행위의 방법과 과정은 앞에서 살펴 본 빌리 브란트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두 사람의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은 각각 이러한 그들의 사유체계와 신념에 의거한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행위 방식에 기인했다. 김대중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서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김대중의 사상이나 정책이 브란트의 것을 모방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두 사람의 사유체계와 행위 방식이 매우 유사한 것이다. 김대중이 민주주의 사상의 아시아적 전통과 연계하면서 글로벌민주주의를 주창한 것은 서구의 방식을 뛰어넘는 그의 고유한 사유체계와 정책비전 정립 방식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김대중은 1993년 1월부터 5개월 동안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유학하면서 그의 신인도주의와 글로벌민주주의에 대해 기든스(Anthony Giddens) 교수와 많은 토론과 뜨거운 교감을 나누었음을 밝히고 있다.<sup>112)</sup> 김대중은 본 논문이 기본 이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구성주의 이론의 대가와 그의 끊임없는 구성과정의 한 단계인 글로벌민주주의를 토론하고 교감했던 것이다. 글로벌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두 사람 사이의

111)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407-408쪽.

112)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407-408쪽.

토론 속에서 출현했다고 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기든스는 구조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 구성에 의해 구조화라는 과정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과정으로서 시·공의 확장과 함께 민주주의가 확대 되는 세계화를 상징했다. 필자가 보기에 김대중과 기든스의 만남은 구성주의 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삶의 방식과 정치철학을 실천해 온 한 위대한 정치가와 구성주의 이론의 대가 사이의 공론장이었으며 새로운 구성이 진행되는 한 과정이었다.

구성주의 이론의 시각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서 볼 수 있는 김대중의 민주주의 개념 속에서 그의 통일정책은 물론 앞으로 그가 야당시절 지방자치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분투한 점, 대통령으로서 인권위원회 신설, 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노사정위원회 상설화, 정보통신 촉진 정책, 일본 문화의 개방, 아시아 및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활동 등 제반의 정책과 활동들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적용하여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분단극복 정책을 두 사람의 신념과 행위의 의미 그리고 그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체계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다.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은 민주주의에 의거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 나감으로써 분단을 극복하려 노력하였기 때문에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 공론장 개념의 연계는 그들의 분단극복 정책을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한 자발적인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추구는 간주관성의 소통에 의한 공론장의 활성화이며 그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해 가려한 정치적 노력의 여정이었다. 서로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발상의 방식에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분단극복 및 세계평화를 이루려는 정책적 구상에 대단히 큰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이론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하여 적용한다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니며 앞으로 많은 깊은 노력을 요한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국가 정상으로 활동한 시점이 다르고 독일과 한국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토양이 다른 만큼 차이점들



이 또한 많다. 예를 들어, 빌리 브란트는 나치 시대에 망명생활을 하면서 민주화투쟁을 하였지만 전후에 그가 정치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을 때는 그의 터전인 서독은 민주화 되어 있었다. 김대중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정치해야 했다. 북한이 일으킨 한국전쟁을 겪은 상황에서 그의 삶과 정치활동 터전인 남한에서는 반공주의가 서독과는 다르게 강했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봐도 빌리 브란트가 민주주의와 연관한 동방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도양은 김대중의 것과 매우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족주의 및 반공이라는 지배담론이 사회 구조로서 작용하는 현상이 서독에서의 정도와는 다르게 남한에서는 대단히 강했다. 그것은 민주주의 확대와 분단극복 정책을 연계하는데 있어서 김대중으로 하여금 빌리 브란트와는 다르게 큰 시련을 겪게 하였다. 민족주의 지배담론과 관련해서 본다면, 초국가주의 정체성 구성의 실험이 유럽통합으로 실현되고 있는 유럽에 속한 서독과 그러한 의식과 경험이 전무한 동아시아에 속한 남한은 전혀 다른 토양이었다. 이는 두 사람의 민족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 단위의 정체성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른 정도의 상황이 드리워져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리하여 이는 또한 민주주의 공론장에 의거한 분단극복 정체성의 구성 노력이 많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 브란트는 유럽차원의 공론장을 통해 구성주의적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했다고 한다면, 김대중의 동아시아 공동체와 분단극복을 연계하는 정책적 구상, 실천의지 및 정책추진은 너무나 큰 난관에 부딪혔다. 그것은 그들이 직면한 구조적 토양의 차이에 기인했다. 그러나 김대중이 이러한 시련에 좌절하지 않고 서양을 뛰어넘는 아시아의 지적 전통과 연계하여 민주주의 소통의 장을 구상하며 새로운 차원의 상호구성 방식을 제안했다. 이것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전제하는 지구민주주의였고 그가 제창한 신인도주의였다. 이는 그의 참으로 창의적인 도전과 응전의 구성방식이었다. 정치가 김대중이 구성주의 이론의 대가 기든스(Anthony Giddens)와 뜻을 같이 하면서 소통하고 지구민주주의를 논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서양의 사상과 동양의 사상의 변증법적 통일을 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빌리 브란트를 뛰어넘는 김대중의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이 측면들은 후속 논문들을 통해 더욱 깊이 조명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 국문초록

**분단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정책의 상호관계 :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주주의 이념과 정책, 분단극복  
방안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노명환

본고에서 필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지도자 빌리 브란트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분단극복 정책의 상호 연계관계를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 비추어 비교·분석하였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자유라는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인 구체적 삶의 측면에서 이해했으며, 이를 평화체제의 상호관계에 주목했다. 평화는 소통과 상호구성을 위한 장의 전제조건이었고 또한 이러한 소통과 상호구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정한 상호 소통을 통한 공동의 의식의 구성 및 표출과 행위로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장으로 보았다. 이러한 소통의 장은 하버마스 개념의 공론장으로 이해될 수 있었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삶의 조건을 공동으로 향상시키면서 간주관성 차원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리고 이해관계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 장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이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들의 사상과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이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내재하는가 하면 그들이 각자 살았던 시대와 공간적 토양이 달라 또한 뚜렷한 차이점들을 보여주었다.

## &lt;주제어&gt;

빌리 브란트, 김대중, 구성주의, 하버마스의 공론장, 민주주의와 분단극복

**Abstract**

---

**Mutual Relations between the Democracy  
and the Unification Policy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emocracy Concept and  
Unification Policy of Willy Brandt and Kim Dae Jung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nstructivism and the Public Theory of  
Jürgen Habermas**

---

Noh Meung-hoan

In this article the author analyzed the mutual relations of the democracy concept and the unification policy of Willy Brandt and Kim Dae Jung in comparative aspects applied to the constructivism and the public theory of Jürgen Habermas.

They understood the democracy not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ormal system, but also with the aspect of the freedom and the concrete social and economic life conditions. They focused on the mutual necessary relations between the democracy and peace. Peace was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democracy and peace could be realized through democracy. They understood the democracy as the so called 'public spher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ommon identity and common interests based on the fair and democratic communications, namely the communication of the intersubjectivity. In this sense we can apply the theories of Constructivism and Habermas's public sphere and communicative action theory for the understanding the concepts and policy of Willy Brandt and Kim Dae Jung. Between the ideas and policies of Willy Brand and Kim Dae Jung we see the very close similarities and at the same time obvious differences based on the time and space, especially cultural conditions.

**<Key words>**

Willy Brandt, Kim Dae Jung, Constructivism, Habermas's Public Sphere,  
Democracy and Unification Policy

**참고문헌**

**1. 1차 사료**

- 김대중, 『옥중서신』(한울, 2000, 제1쇄; 2009, 제3쇄).
-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한길사, 1994, 제1쇄; 2009, 제4쇄).
- 김대중, 『대중참여경제론』(산하, 1997, 제1쇄; 2009, 제4쇄).
-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삼인, 2011).
- “Abschiedsrede des Parteivorsitzenden Willy Brandt beim außerordentlichen Parteitag der SPD in der Bonner Beethovenhalle am 14. Juni 1987,” Bedeutende Reden Willy Brandts,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Berlin.
- Akten zur Auswärtigen 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71).
- Brandt, Willy, Über den Tag hinaus. Eine Zwischenbilanz, (Hamburg, 1974).
- “Brandt im Interview mit Günter Gaus am 25. September 1964,” zit. nach Berliner Ausgabe, Bd. 4, Nr. 54.
-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rsg.), Berliner Ausgabe Band 6, Willy Brandt, Ein Volk der guten Nachbarn. Außen- und Deutschlandpolitik 1966-1974 (Bonn, 2005).
-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hrsg.), Friedensnobelpreis für Bundeskanzler Brandt (Bonn, 1971).

**2. 2차 사료**

- 김창호,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 김재현 외 저, 『하버마스의 사상. 주요주제와 쟁점들』(나남출판, 1996).
- 노명환,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 정책 :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EU연구』 30(2012).
- 박경서·서보혁 외 지음,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한국학술정보㈜, 2012).
- 오디 클로우츠·시실리아 린치 저/손혁상·이주연 옮김, 『구성주의 이론과 국제관계 연구 전략』(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Audie Klotz·Cecelie Lynch, Strategies for Research in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London·New York 1991; 1. version 1983)
- Barnett Michael, Dialogues in Arab Politics: Negotiations in Regional Or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8).

- Bracher Karl·Jäger Wolfgang·Link Werner, Republik im Wandel 1969–1974, Die Ära Brandt (Stuttgart; Mannheim, 1986).
- Giddens Anthony,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1984); 황명주·정희태·권진현 역, 『사회구성론』(자작아카데미, 1998).
- Grebing Helga, Willy Brandt – Ein Leben für Freiheit und Sozialismus (Schriftenreihe der Bundeskanzler Willy– Brandt Stiftung, 4, (Berlin, 1999).
- Habermas Jürgen, Strukturuwandel der Öffentlichkeit, Hermann Luchter hand Verlag 1962, 5. Auflage (1971).
- \_\_\_\_\_,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I, II, Handlungsrationalität und gesellschaftliche Rationalisierung,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1981).
- Habermas Jürgen 저/윤형식 옮김, 『아, 유럽. 정치저작집』 1(나남, 2011); Ach, Europa, Kleine Politische Schriften XI. (Frankfurt am Main: Suhrkamp, 2008).
- Latin David D., Identity in Forma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 Niedhart, Gottfried, “Revisionistische Elemente und die Initiierung friedlichen Wandels in der neuen Ostpolitik 1967–1974,”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28 (2008).
- Rother, Bernd, “‘Entwicklung ist ein anderes Wert für Frieden’. Willy Brandt und der Nord–Süd–Konflikt von den 1960er bis zu den 1980er Jahren,” in: Jost Dülffer und Gottfried Niedhart (hrsg.), Frieden durch Demokratie?, Klartext Verlagsges (Mbh, 2010).
- Schröder, Richard, Impulsvortrag. “Mehr Demokratie wagen” 1969 – “Mehr Freiheit wagen” 2005, Willy–Brandt–Gespräch 2006. Orientierungen für eine Gesellschaft im Umbruch?. Vortrag und Podiumsdiskussion am 10. Oktober 2006 im Festsaal des Roten Rathauses in Berlin, Schriftenreihe der Bundeskanzler–Willy–Brandt–Stiftung Heft 14
- Spiering, Menno, “National Identity and European Unity,” in Michael Wintle (edt.), Culture and Identity in Europe. Perceptions of divergence and unity in past and present (Oxford, 1996).